

내년 4월 조성공사 착공...단계별 사업비 확보가 관건

■여수 경도개발 어디까지 왔나

5년 남았다. 여수 끝자락에 닿을 듯 말 듯 떨어져 있는 조그만 섬, 경도(대경도·2.32㎢)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섬 전체가 세계적인 해양복합관광단지로 변신한다. 갯창 어로 유명했던 이 섬은 이제 앞으로 최고급 호텔·콘도·빌라, 워터파크, 쇼핑센터, 마리나, 해양친수공간 등이 들어선, 연간 38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단지로 개발된다. 2024년 2단계 사업이 준공되고, 이어 3단계가 마무리되는 2029년이면 총 1조원이 넘게 들어간 아시아 최고 수준의 휴양지가 전남에 생긴다는 얘기가.

불안한 시선도 여전히 남아있다. 세계 경제는 심각한 하강 국면인데, 국내 경기도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글로벌 기업들도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계획대로 투자가 실현될 수 있을지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도권을 비롯, 국내 유명 관광 테마파크 건설 사업들도 투자가 지지부진한데, 다음달 말까지 당초 950억 원을 내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6000억원, 2029년까지 추가로 4000억원 넘는 사업비를 예정대로 투자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 경도와 인접한 소경도를 비롯한 경도권 전반에 대한 공공투자를 통해 민간투자를 더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적인 수준의 휴양지로 변신하게 될 경도에 맞춰 그 주변의 시설, 경관 등도 함께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올해 말까지 950억원 납부하고 내년 4월 공사 착공하나=18일 전남도에 따르면 경도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담보할

섬 통째로 해양관광단지 변신

2024년 2단계 사업 끝나면

연간 380만명 찾는 관광지

2029년 3단계 사업 마무리

만한 사항으로는 투자자인 미래셋컨소시엄이 전남개발공사와의 '여수 경도 골프앤리조트 시설과 부지 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납부한 계약금(52억) 외 중도금 950억 원을 올해 말까지 지급하느냐 여부가 꼽힌다.

미래셋컨소시엄은 지난 2017년 전남개발공사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사업과 관련, 개발공사 소유의 여수 경도 골프앤리조트 시설과 부지를 3433억원에 일괄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차례에 걸쳐 계약금(52억원), 중도금(2019년 12월 31일 950억원 납부), 잔금(2431억·2024년)을 완납하기로 했다. 애초 계약대로 다음달 말까지 중도금을 납부한다면 사업 추진의 신뢰성을 담보할만하다는 게 지역개발업계 시각이다. 단지 조성공사를 내년 4월 예정대로 진행하는 지 여부도 원만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주요 일정이다.

◇마스터플랜·실시계획 수립 후 3단계로 2029년까지 완료 예정=미래셋컨소시엄은 애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내년부터 2024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도 골프앤리조트 매각 비용과는 별도로 투입되는 것으로, 미래셋측은 오는 2024년까지 경도해양관광단

지 214만3353㎡규모 부지에 호텔·콘도·빌라, 해양친수공간, 컨벤션센터, 쇼핑센터 등을 조성하겠다는 실시계획도 지난 5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해 승인받은 바 있다.

숙박시설의 경우 럭셔리호텔(150실)과 워터파크호텔(252실)을 조성하고, 워터파크콘도타워(295실)·워터파크프리미엄콘도(165실)·선라이즈베이콘도(110실)와 인근 무인도인 송도·노도에 빌라콘도(8실) 등 956실을 짓기로 했다.

미래셋측은 이후 마스터플랜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당초 구상했던 테마파크, 기업연수원, 오토캠핑장 등은 계획에서 제외했고 2020~2024년(2단계), 2025~2029년(3단계) 등으로 나눠 워터파크, 마리나 등 해양레저시설과 케이블카, 빌라콘도 시설을 3단계 기간 중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같은 점을 감안, 2029년까지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투자금액의 3%를 지연배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해놓았지만 매년 1000억원이 넘는 투자가 제 때 이뤄져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일각에서는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와 연륙교 개통에 맞춰 사업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역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조성에 따른 효과를 전남 전 지역에 미치게 하고, 다른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지욱 기자 dok2000@kwangju.co.kr



무안군의회와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가 18일 오후 광주시청을 방문.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군공항 이전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한 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용섭 시장 “군공항 이전 논의하자” 무안군수에 만남 제안

무안 범대위 광주시 항의 방문

지역정치권 與총선공약 채택 촉구

이용섭 광주시장이 18일 광주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김산 무안군수에 직접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군공항 이전사업을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당과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교착상태에 놓인 군공항 이전의 불교를 터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이용섭 시장과 김산 무안군수, 무안군 범군민 군공항이전반대대책위에 대화를 위한 면담을 공식 제안한다. 시간과 장소는 무안군측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지역사회 관계자 항의 방문을 받은 직후 이런 입장문을 냈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범대위)와 무안군의회 광주 군 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범대위는 광주시청 앞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광주시

가 이전후보지로 무안군을 기정사실화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안군민들은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광주시는 겉으로는 무안 외 후보 지역을 있다면서 속으로는 다른 지역을 염두에 두지 않는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상생이라는 명분으로 9만 무안군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전 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진정한 상생을 원한다면 유지를 원하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시청 접견실에서 이 시장을 만나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비공개 면담을 제의했지만 범대위는 “자칫 협의하는 모습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거부하고 돌아섰다.

이에 앞서,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총선 공약 채택과 함께 예비후보자들을 중심으로 군공항 이전사업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국방부는 국정과제인 공항 이전을 적극적으로 완수하고 강력한 지원을 근거로 사업이 탄력반도록 군공항이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수년째 저지리 결음을 겪고 있다.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권의(광주시)→이전 타당성 검토(국방부)→예비 이전후보지 선정(국방부)→이전후보지 선정(이전후보지 선정위)→주민투표/유치신청(이전후보지 단체장)→이전부지 선정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광주는 2014년 이전 권의서를 제출하고, 2016년 군 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적정통보)를 받았지만 국방부는 다음 단계인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미루고 있다.

국방부는 “작정성 검토를 거쳐 무안군, 해남군을 이전 적합지로 정했으나, 두 자치단체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사전 단계인 국방부 주관의 협의 절차(공청회·설명회)를 거부하고 있어 현 상태로는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기 어렵다”며 머뭇거리고 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과 관계없이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에 통합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전남도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 대통령 일정 비우고 ‘국민과의 대화’ 준비 집중

오늘 오후 8시부터 100분간

MBC ‘국민이 묻는다’ 생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준비에 집중했다.

19일 오후 8시부터 MBC에서 100분간 방송되는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공개회의인 타운홀(town hall)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300명의 방청객이 즉석에서 손을 들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문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등 엄중한 외교·안보 사안부터 이른바 ‘조국 정국’ 등 문 대통령으로서는 다소 쟁점될 수 있는 이슈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질문이 쏟아질 수 있다. 또 부동산 대책과 기업활력 제고 등을 아우르는 경제 문제,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된 대입제도 문제 등도 질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과의 대화가 보기에는 쉬워보여도 외교·안보·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이 간단치가 않다”면서, “문 대통령이 통상 월요일에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를 이날 열지 않은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자리는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의견이 여과없이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국민 통합의

장’이자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생방송 준비를 하면서도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일본의 가시적인 태도 변화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남은 기간 획기적인 기류 변화가 없다면 이대로 효력이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척이 실린다. 그러면서도 막판 반전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전망도 동시에 나와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한일관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저작재산권 광주저작권서비스센터와 함께 지키세요

FREE 무료 저작권 상담 서비스

신청자에게 방문하는 편리함

기업특성에 맞춤 전문가매칭

저작권 정보를 밝게 비춰주는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문의전화 **062-610-2432, 2425**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GITCT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